

러시아, 벨라루스에 전술핵 배치 위협

30년만에 국외 배치...세계 촉각 우크라, 유엔 안보리 소집 촉구

러시아가 '맹방'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로 하면서 세계 각국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촉구했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전술핵배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보좌관회의 서기는 26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통해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크렘린이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전날 벨라루스의 요청에 따라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1일까지 전술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하겠다는 계획까지 제시했다.

한 달 전 국정연설 당시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미국의 핵실험시

특같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것에서 더 나아가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푸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1990년대 중반 이후 국외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세계 각국은 러시아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카자흐스탄 등 신생 독립 4개국에 배치됐던 핵무기는 이듬해 이들 국가가 러시아로 핵탄두를 옮기는 데에 동의한데 따라 1996년 이전이 완료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유엔의 안보리 회의의 소집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영국·중국·프랑스를 포함해 유엔 안보리가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 국가들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의 핵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트위터에 "벨라루스가 러시아 핵무기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책임한 긴장 고조 행위이며 유럽의 안

보를 위협한다"고 썼다.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도 '유럽과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 강화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미국이 수십년간 전술 핵무기를 나토 동맹국에 배치해왔다는 푸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는 "푸틴 대통령이 끌어들이는 나토의 핵공유 관련 비유는 사태를 오도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 행보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쟁 초반부터 (푸틴 대통령의 핵무기) 발언이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인 전략 억제 태세를 변경하게 할만한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는 존 케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의 CBS뉴스 인터뷰 등을 토대로 러시아의 실질적 전술 핵 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벨라루스는 지난해 2월 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에서 자국 내 군사기지를 제공하는 등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 무력화' 입법에 반기 든 이스라엘 시위 격화

총리실, 입법 비판 국방장관 해임...야당·법조계·시민단체 대응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 개혁'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의 해임을 발표한 하루 뒤인 27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시민들이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연정의 사법정비 입법에 공개 반발하는 고위 공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스라엘 전역에서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여론의 반발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갈란트 장관은 사법 정비 입법을 공개 비판한 인물이다.

네타냐후와 가까운 소식통들은 훈련 및 복무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들에게 강경대응 하지 않은 것이 해임의 이유라고 귀띔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여당인 리쿠드당 소속 의원이기도 한 갈란트는 전날 TV로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연립정부가 '사법 정비'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지만, 주요 변화는 대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입법 절차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자미르 총영사는 트위터에서 "나는 더 이상 이 정부를 대표할 수 없다"며 "이스라엘이 민주주의와 자유의 깃발로 남아있도록 하는 것이 내 의무"라고 썼다.

라고 썼다.

자미르 총영사는 관광부 장관을 지내던 2020년 10월에도 당시 코로나19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정부가 강경 진압하자 이에 반발하며 사임한 바 있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안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군 전력의 한축을 이루는 예비역 군인들도 이에 동조해 잇따라 훈련 불참과 복무 거부 선언을 했다.

야권 지도자들은 강경 반발했다. 아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네타냐후는 갈란트를 해임할 수 있지만, 현실을 부정하고 연정의 광기에 저항하는 국민까지 해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시위 지도부도 국방부 장관 해임에 항의하며 예루살렘과 하이파, 베르세바 등지에서 가습 시위에 나섰다. /연합뉴스

美 IRA 세액공제 규정 이번주 발표... 韓 입장 반영 여부 '촉각'

광물·배터리 부품 요건 따라 보조금 혜택 범위 구체화 'FTA 체결국' 확대도 관심

미국 재무부가 이번 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 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재무부가 작년 12월29일 발표한 백서에 따르면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 가운데 '배터리 부품 요건'은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 전체 부품 가치 중 50% (2029년까지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이 북미 지역 안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만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또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 (2027년까지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해야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도록 명시했다.

다만, 재무부는 백서에서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이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엔 원산지를 FTA 체결국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는 중국 등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도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광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리한 규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는 인도네시아와 아르헨티나를 포함해달라고 요청해



美 미시시피주 댈턴 토네이도 최대 시속 80마일(약 128km)에 이르는 강풍과 골프공 크기만 한 우박을 동반한 토네이도가 미국 동남부 미시시피주를 강타한 지 이틀 후인 26일(현지시간) 사키 카운티 롤링포크의 한 건물이 파괴돼 있다. /연합뉴스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핵심광물 세액공제와 관련해 'FTA 체결국'으로 인정하는 국가를 확대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배터리 부품으로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배터리 셀, 모듈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하면서 음극재와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물질인 '구성 재료' (Constituent materials)는 배터리 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이는 음극재와 양극재의 재료는 북미에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역시 한국 기업에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미국 정부

와 지속해서 협의해온 한국 정부는 세부 규정이 백서 내용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다만, 변수가 있다면 미국 배터리 업계 일각에서 '구성 재료' 부분이 미국 내 공급망 강화라는 IRA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미국 기업은 음극재·양극재의 재료도 북미에서 만드는 경우에만 배터리 부품 세액공제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지면 향후 재무부가 세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달리 생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

유럽 26일부터 서머타임... 한국과 시차 7시간

유럽의 올해 일광절약시간제(서머타임)가 26일(현지시간)부터 시작돼 한국과 시차가 7시간으로 줄어든다.

서머타임 개시에 따라 유럽에서 26일 새벽 2시는 새벽 3시로 조정됐다. 이날 새벽 2시를 기해 시곗바늘(시침)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1시간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한국과 시차는 중앙유럽표준시(CET) 기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든다. 올해 서머타임은 오는 10월 29일 해제된다. 일광절약시간제는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대

비해 표준시를 1시간 앞당기는 제도로, 겨울철을 앞두고 서머타임이 해제되면 1시간 뒤로 다시 늦추게 된다. 유럽연합(EU)은 1996년부터 3월과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서머타임을 개시, 종료하고 있다.

서머타임은 낮 시간대를 활용해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한다는 취지에 따라 세계 7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1973년 오일쇼크 때 처음 도입됐으며 독일에서는 198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문의 전화

1644-6430

휴먼이엔티주식회사